

#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노호래 · 이대성\*

- |                       |                   |
|-----------------------|-------------------|
| I. 서론                 | IV. 북한의 대남테러 대응전략 |
| II.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       | V. 결 론            |
| III. 북한의 대남한 향후 테러 전망 |                   |

## Abstract

### Types of North Korean Terrorism Attacks and Response

Most of terrorist attacks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were committed by North Korean communists. There were also many South Koreans who were kidnapped by North Korean agents in foreign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North Korea must have been placed at the top of the list of terrorist countries.

Following the historic June 15 declaration made by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e declare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no one can make it clear that there will be no attacks by North Korean terrorists. It is also clear that North Korean side insists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any kind of terrorism occurring in South Korea.

Even they hope that communists will be boosted up on the South Korean soil with the recent favorable environments. Nowadays many nationals from the northeastern areas of China have entered South Korea and living here. During the past 5 decades, North Korean leadership has tried to change its tactics for

**Key word:** terrorism, Anti-terrorism

terrorism. So we expect them to use pro-communism figures and Chinese compatriots and have linkage with overseas terrorist groups in order to undermine Sou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s are likely to use explosive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attack diplomats, businessmen, tourists and overseas compatriots in foreign countries. Therefore, we need to seek countermeasures against possible attacks in the three aspects.

First, so-called Anti-terrorism Act must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it is urgently needed to draw a policy in order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Third, diplomatic means must also be sought to this end. We must positively respond to any possible terrorism by both North Korea and third countries until it is clearly proved that the South-North reconciliation develops into a phase of unity stimulated by true passion toward peace.

\* 노호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이대성: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I. 서론

현대사회는 위협과 공포가 가득한 풍요의 사회이다. 과거의 위협은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가 주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인간의 이해관계, 이념의 충돌, 문화적 수단과 목표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는 전쟁의 공포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혼란과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식 속에 범죄나 테러라는 말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처럼 표현된다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매체나 영화사는 무분별하게 테러를 주제로 한 제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 뉴욕, 피츠버그에서 공중 납치한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적인 자살공격테러는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알 카에다의 항공기테러 공격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약 3천 6백여 명의 인명피해와 22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명 피해는 美 역사상 남북 전쟁이후 1일 사망자 數로는 최대를 기록하였다.<sup>2)</sup> 또한, 2004년 3월 11일 아침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기차역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근열차를 대상으로 10여 차례 연쇄폭탄테러가 자행되어 사망 198명, 부상 14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sup>3)</sup>

이러한 대규모 테러사건이 보여주듯이 현대 테러는 최정예 테러리스트들이 고도의 치밀함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 무대도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테러는 국제 사회 질서를 파괴·위협하고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여파는 가

1) Arblaster, Anthony, "Terrorism: Myths, Meanings, and Moral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3 (1997), p. 413.

2) 『동아일보』, 2001년 9월 12일.

3) 『조선일보』, 2004년 3월 13일.

4) Holmers, Kim R., "The Terrorist Attack on America: Implication For U. S. Policy,"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vol. 11, no. 7 (2001), p. 45.

히 충격적이라 할 것이다.<sup>5)</sup> 우리도 이러한 테러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국·내외의 테러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 북한은 지난 2001년 10월 5일 이형철 UN주재 대표부대사가 UN총회의 ‘국제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조치’ 회의에서 테러에 대한 유감과 테러리즘과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82년 12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그 다음해인 1983년 10월 9일에 버어마랑군 묘소에서 우리 대통령 및 각료 등 국제적으로 최고의 보호인물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였다. 또한 1983년 5월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KAL기 폭파사건을 자행하여 무고한 115명의 승객전원을 살해하는 잔혹성을 보여주었다.<sup>6)</sup>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수많은 테러를 자행하였다. 특히, 위의 두 사례는 북한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하고도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단적인 사건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근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언을 신뢰하기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테러 주체성은 아직도 북한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대남테러전술과 테러유형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의 대남한 향후 테러전망을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근거로 북한의 테러가능성과 향후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입법·정책·외교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 김태진,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응책,”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2003), p. 45.

6)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사건정보자료: 연도별』 (1985), p. 435.

## II.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

### 1. 북한의 시대별 대남한 테러전술

#### 1) 정권수립기(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소련 정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테러전술은 지하조직을 통한 합법·비합법 양면작전으로 폭력도발과 테러가 주를 이루었다.

#### 2) 전후복구기(1950년 6월 25일부터 1960년 4월 19일까지)

6·25 남침전쟁 종결 후, 북한의 대남공작방향은 주로 평화선전공세에 초점을 두었다. 휴전 후, 북한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명분 하에 일체의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면서 군수공업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표면적인 평화공세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테러는 전후복구에 역점을 두기 위해 최소한에 그쳤다.

#### 3) 혁명추구기(1960년 4월 20일부터 1970년 8월 15일까지)

4·19혁명 후, 한국 사회의 무질서를 틈타 투쟁방향의 전향을 시도하고 간첩의 대량 투입과 용공세력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은 대남 게릴라전 수행을 위하여 124군 부대와 특수부대요원을 양성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을 표적으로 한 테러기반을 확보하였다.

#### 4) 양면전술기(1970년 8월 16일부터 1980년 12월까지)

북한은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1960년대의 전략추진 성과와 1970년대의 내외정세평가에 기초하여 대남전략 기본방향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1972년 7월 2일 남북공동성명발표, 1974년 3월 20일 대미평화협정제의 등과 같은 평화화해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 호전적이고 무차별적인 테러행위를 통하여 양면성을 극명히 보여주었다.<sup>7)</sup>

#### 5) 대화추구기(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26사태 이후, 북한은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였으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이 거세지고 정국이 불안한 틈을 이용하여 남한내 혁명을 유도하는 대남전략을 획책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리회담 및 남북 대화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혁명추구기에 양성한 124군부대, 인민무력부 소속 특수부대요원 9만 9천명, 노동당 연락부 소속 공작원 1천명, 그리고 조총련 공작원 4백명 등을 기반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비정규 특수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 6) 방어추구기(1991년부터 현재까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 탈냉전 여파로 구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로 북한의 대남공작전술은 대내·외적으로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로 러시아·중국·동구권 국가와의 국교 수립,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한기본합의서 발표, 미·북한 제네바 핵합의, KEDO에 의한 경수로공사착공 등은 북한의 테러의지를 자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7) 최운수, “국가지원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pp. 137-141.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식량 원조를 하였기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테러행위는 국지적으로 계속되어 북한의 테러 도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 2. 북한의 대남한 테러유형

### 1) 항공기테러

#### (1) KNA 민간항공기납치

1958년 2월 16일 부산발 서울행 항공기에 승객으로 가장한 간첩 기덕영의 주도로 다른 4명의 간첩들이 총기로 조종사를 위협하여 강제로 납북하였다. 이로 인하여 승무원 3명, 승객 28명이 납북되었다. 이 중에는 미군장교 1명과 국회의원 1명이 포함되었다. 간첩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대구의 군사비행장 근처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KNA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은 북한의 사전지령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한국경찰국의 수배인물인 간첩에 의해 장기간에 계획된 것으로서 이들이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 (2) KAL YS-11 민간항공기납치

1969년 12월 11일 12시 25분 강릉발 서울행 항공기가 비행과정에 강제로 납치되었다. 항공기는 승무원 4명을 비롯하여 승객 47명을 태우고 대관령 상공을 비행할 때, 객실에 앉아 있던 간첩이 조정실로 들어간 후, 강제로 항공기의 진로를 바꾸게 하였다. 항공기가 동해상에 진입하자 두 대의 북한 전투기가 접근하여 북한의 함흥부근 연포 비행장에 강제 착륙시켰다.

8) [http://www.mnd.go.kr/image/04/50/50\\_10.pdf](http://www.mnd.go.kr/image/04/50/50_10.pdf).

이 사건은 1958년 KNA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이후 두 번째로서 다시 한번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면서 인도주의적 조치로 승객과 기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70년 2월 14일 탑승객 59명중 39명이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하였다.

### (3) KAL F-20 민간항공기 납치미수

1971년 1월 서울발 속초행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북한으로 납북시키려다가 실패하였다. 이는 북한의 민간항공기납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비의 성공사례이다.

### (4) KAL 858 민간항공기 폭파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 05분경에 민간항공기가 버어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도 역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이다. 범인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 소속의 대남특수공작원 김승일과 특수여지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 KAL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0월 7일 김정일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을 통하여 두 공작원들에게 내린 친필공작지시에 의해 자행되었다.<sup>9)</sup>

## 2) 폭탄테러

### (1)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미수

1970년 6월 22일 북한무장공비 2명이 한국대통령 및 정부요인들이 6·25전쟁 20주년을 맞아 국립묘지 현충문 참배를 기회로 이용하여 폭파·사살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폭파임

9)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안교육』 (서울: 한국공항주식회사, 2002), p. 34.

무를 띠고 동년 6월 10일경 경기도 군지만에 상륙하여 육로로 수원, 광주, 남양, 군포 및 안양을 거쳐 서울로 침투했다.

이들은 정부요인을 암살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국립묘지 현충문 옥상에 크레모아 원격 조정폭탄을 천장에 설치하던 중 그들의 실수로 사전에 폭발됨으로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 폭파로 인하여 그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명은 도주하였다.

## (2) 버어마랑군 아웅산묘소 폭파

1983년 10월 9일 북한 테러분자들이 버어마를 공식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국민을 아웅산묘소 참배 시에 살해하려고 기도한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북한군 소좌 진용진, 대위 강민철, 그리고 대위 김치오 3명이 1조로 구성된 북한의 정예특수요원들이었다. 이들은 1983년 9월 9일 동건애국호편으로 북한 옹진항을 출발하여 1983년 9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버어마랑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파견된 2명의 안내원에 의하여 버어마주재 북한대사관 송창휘 3등서기관, 김웅삼, 손기훈이 살고 있는 집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서 이들 테러리스트들은 파괴에 필요한 폭파물을 인계받았다.

테러범 3명은 사고 3일전에 머물렀던 북한외교관 집을 미리 나와 비밀리에 테러공작을 위하여 범행지인 쉐다곤공원 묘지 주위를 사전 답사하였다. 이들은 10월 7일 새벽 02:00분에 비밀리 아웅산 묘지 지붕 위에다 2개의 폭탄을 설치하였다. 8일에는 공원에서 자고 10월 9일 아침 한국의 국민이 자동차로 아웅산 묘역에 도착한 후, 도열하여 대통령 영접을 위한 의식을 연습하는 중에 이들은 위자야 극장 부근에서 원격조정장치로 폭파시켰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으며, 버어마 관계자도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sup>10)</sup>

10) 조용관·유지웅 譯, 『북한과 테러리즘』 (서울: 고려원, 1991), pp. 81-113.

### 3) 요인암살·납치 및 무장간첩 침투

#### (1) 청와대 기습미수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에 직속된 제124군부대 소속의 1개 소대규모인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기습임무를 띠고 서울에 침투하였다. 이들은 동일 밤 10시경 세검정에서 청와대를 향하여 접근하여 오던 중 공비출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의 불심검문을 받자 총격과 수류탄 투척을 통한 테러행위를 감행하다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대대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기습작전은 실패하게 되었다. 정부는 군경합동작전으로 도주한 자들을 추격하여 그 중 1명을 생포하고 26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월북하여 귀환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 (2) 삼척·울진지구 무장공비 침투

1968년 11월 3일 북한의 제124군 특수부대원 무장공비 120명이 강원도 삼척군과 경북 울진군의 경계지점의 해안에 침투하였다. 이들 무장공비대원들은 그 지역주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 (3) 문세광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던 중,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간첩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저격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 영부인 육영수 여사께서 서거하셨다.<sup>11)</sup>

#### (4) 강릉 북한무장간첩 침투

11)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정세』 (1996), p. 10.

1996년 9월 8일 무장간첩을 태운 북한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다. 잠수함에서 내려 상륙한 북한요원 중 생포된 이광수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이었으며, 정찰국 소속의 정예침투요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잠수함은 상어급 소형잠수함으로 침투작전용과 소형함정공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2)</sup>

### (5) 속초 북한잠수정침투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공작을 위하여 우리 영해에 침투했다가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 속초 동쪽 11.5마일 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공기잡이용 그물에 걸려 침몰하였다. 북한 잠수정은 70톤급으로 10~11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공작원 및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sup>13)</sup>

### (6) 김정일 전처 조카인 이한영 피살

1997년 2월 15일 발생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씨 피격사망사건은 북한 남파간첩의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이한영씨는 지난 2월 15일 밤, 자신이 기거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김모(45세)씨집 현관 입구에서 괴한 2명이 쏜 실탄에 이마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뒤 11일만인 2월 25일 숨졌다. 경찰은 이씨 피격현장에서 수거한 탄피가 북한간첩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이씨가 숨지기전 ‘간첩! 간첩!!!’을 외쳤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간첩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본부인 성남분당경찰서를 중심으로 9개월째 수사를 벌여왔으나 범인의 행적을 찾아내는데 실패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최순호 부부 간첩이 진술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드보크’를 발굴한 결과 독침 10개를 담은 편지봉투가 이씨 피격 장소 부근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

12) 『한국일보』, 1996년 9월 19일.

13) 『조선일보』, 1998년 6월 23일.

구 서현동 ‘한솔외국어학원’ 명의인데다 함께 발굴된 무전기가 사건 발생 1달 전가량인 1월 20일 발간된 생활정보지 ‘교차로’ 신문지로 포장된 점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4)</sup>

### (7) 여수 반잠수정침투

1998년 12월 17일 23시 15분 여수 앞바다 4km지점에 괴물체가 접근하였고, 이를 추격 12월 18일 1시40분 2차 포착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5시58분 함포 3발을 발사하여 반잠수정이 침몰하였고 12월 18일 8시10분 잠수복차림 북한군 간첩 시체 1구가 떠올랐다.

## Ⅲ. 북한의 대남한 향후 테러 전망

### 1. 북한에 의한 테러발생가능성

테러지원국들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텔레반 정권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대테러 보복 공격을 보고, 그 대상이 테러지원정권과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테러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6·15 남북회담, 북·미회담 및 UN에서 테러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보아서는 당분간 한국을 향한 테러는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선호하는 입장이기에 언제든지 테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테러발생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4) 『조선일보』, 1997년 2월 17일.

### 1) 친북인사나 간첩에 의한 테러

국내에 있는 친북인사들의 각종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은 더욱 배제할 수 없다. 6·15 선언 이후,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테러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간첩을 파견하거나 한국 내의 고정간첩들과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 2) 국내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이용한 간접지원테러

북한의 간접지원테러 대상의 1순위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다. 조선족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고향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한국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 저임금,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게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가치와 실익 사이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의 기대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15)</sup>

특히, 조선족은 이념의식이 부족하고 남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기에 북한에서 파견되거나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고정간첩에게 간접적 테러수단으로 포섭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이념교육을 받은 조선족이 국내에 잠입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국내 불만세력과 규합하여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가능성

현재 우리나라는 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따라서 해외 테러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도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과 미

15) Robert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68), p. 200.

국의 입국자가 가장 많다.<sup>16)</sup> 특히, 북한은 일본 적군파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테러조직에 무기를 판매했으며,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시리아·리비아 등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17)</sup> 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임과 동시에 제3세계 국가를 통하여 재외국민이나 공관에 대한 직·간접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북한에 의한 향후 테러유형분석

북한의 반세기 동안의 테러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기테러, 폭탄테러, 요인암살·납치 및 무장 간첩 침투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 의해 발생가능한 테러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1) 폭탄테러

폭탄테러의 가능성이다. 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 폭파, 통신케이블 파손, 교통통제실 폭파를 통한 교통 혼란 가중, 가스 공급처 폭파, 컴퓨터 연결망 마비, 그리고 송유관을 폭파함으로써 수십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폭탄의 종류로는 편지·소포 폭탄, 자동차 폭탄, 그리고 변형하기 쉬운 플라스틱 폭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sup>18)</sup>

정부의 주요 기관에는 차량폭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폭탄테러 자행시의 수단으로는 식당이나 자판기 등의 관리·보수유지가 민간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sup>19)</sup>

첫째, 폭탄은 해외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직·간접 구매, 또는 북한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아니면 고도로 훈련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을 남파하여 직접 제작하게 할 것이다.

16) [http://www.moj.go.kr/immi/04\\_data/statistics\\_f.htm](http://www.moj.go.kr/immi/04_data/statistics_f.htm)(검색일: 2004년 5월 23일).

17) U. 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Washington, D. C.: GPO, 2001), pp. 75-76.

18) 강영숙·이민용 譯, 『테러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2002), p. 104.

19) 이황우,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테러유형과 대응책,”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1), p. 4.

제작된 폭탄의 운반책은 일반수하물의 폭탄이 설치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인을 이용할 것이다. 둘째, 일반수하물에 운반되거나 설치된 폭탄을 원격 리모콘을 이용하여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에 의해 이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조선족이나 국내불순세력을 이용한 차량폭탄테러의 가능성이다.

## 2) 생·화학테러

생·화학무기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로운 미생물·생물체·독소·질병매개물을 이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치사 및 무능화시키는 테러행위를 말한다.<sup>20)</sup> 이러한 생·화학무기는 종래의 테러 수단과 방법의 변화를 조장하고 있다. 생·화학무기는 가장 편리하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때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크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sup>21)</sup>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해 7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생산조직과 체계를 갖추었으며 화학무기의 경우 현재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서 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무기도 페스트균, 콜레라균, 탄저균 등 13여종의 생물무기를 안주 등 8개 생산시설과 4개 연구소, 6개 저장시설을 갖추어 다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2)</sup> 만일 북한에서 세균테러를 자행할 경우 그 대상지역은 좌파성 인사들이 없는 건물이나 기관을 택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군부대, 국가정보원, 정부종합청사, 언론사 등이 그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지하철, 시장, 백화점, 대형상가, 고원,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대한 생·화학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

20) 노호래·김창윤,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2002), p. 220.

21)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Global Microbial Threats in the 1990s* (Washington D. C.: The White House, 1996), p. 2.

22) 고용복·윤문근, 『화생방전의 오늘과 내일』 (서울: 한국군사사회연구소, 1995), p. 302.

### 3) 해외주재공관·상사원, 해외여행객, 그리고 해외동포를 향한 테러

현재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6개국 9개 조직,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13개국 14개 조직, 그리고 유럽·미주 지역에 17개국 32개 조직 등 총 36개국 55개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sup>23)</sup> 현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해외동포의 숫자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테러에 노출될 확률자체가 높아졌다. 이는 북한에 의한 해외공관, 해외주재상사원, 그리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국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근거이다.<sup>24)</sup>

첫째, 해외주재공관에 대한 테러가능성이다. 1996년 10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은 해외주재 한국외교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더욱더 테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25)</sup>

둘째, 해외주재상사원에 대한 테러가능성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도 자본, 기술, 인력, 그리고 상품을 진출시켜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테러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다른 국가보다 앞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주재상사원이 북한 테러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견된다. 또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기업이 해외건설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과 함께 국익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근로자들도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해외여행객에 대한 테러가능성이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증가는 단순한 여행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해외 출장의 증가도 포함된다. 또한, 여행지역도 다양해져서 초기에는 일본, 미국을 주요 여행지역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여행 대상지역이 사회주의권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여행객의 증가와 여행지역의 다변화는 테러대상의 확대를 의미한다.

23)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 9.

24) Chris Ryan, "Tourism, Terrorism and Violence," *Conflict Studie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tudy of Conflict and Terrorism (1991), p. 244.

25)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정세』, p. 11.

## IV. 북한의 대남테러 대응전략

### 1. 테러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

#### 1) 테러방지법의 제정

정부의 대테러에 관한 법규 제정과 실제적 훈련에 관한 사항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이 발전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남한 테러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의 테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대테러관련 법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26)</sup>

- (1)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업무분담이 구분되어 있으나 통일적인 대테러종합전담기구가 법적으로 보완되지 않았다.
- (2) 군병력에 대한 치안유지 기능여부 및 지휘권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의 근거와 긴급출동의 결정 및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관한 하부책임에 관한 대책이 미비하다. 종합적인 대테러관련법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1) 테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법령, 테러정책의 기획에 관한 사항,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관련부처의 협력, 예방을 위한 보안 및 정보수집 범위, 테러진압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시킨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 (2) 테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군병력 사용근거와 지휘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대테러전담기구가 테러 예방 및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 (4) 테러방지법 규정이 정치적 목적과 임무에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목적을 엄

26) 최윤수,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에 안전한가?,” 『한국공안행정학회 국제학술발표회』 (2001), pp. 36-37.

격히 제한하고, 대테러전담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테러전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 2) 대테러전담기구 설치

정부는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조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법령으로 제정·공포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대테러 추진방향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과 대책을 강구하고, 부처별로 대테러전담기구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대테러전담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1) 외교통상부

국외테러를 담당, 국제기구가입 및 국제협약체결, 그리고 외국정부와 협력체제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행정자치부

국내테러를 담당, 주요인사·주한외국인 등의 경호안전대책, 그리고 경찰청 대테러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 (3) 법무부

테러분자들의 잠입저지대책수립·시행, 위조여권호별 연구개발장비 확보, 출입국제조사 업무, 그리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27)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8), p. 261.

#### (4) 국방부

대테러특공부대 편성운영, 대테러 특수전술연구·개발·장비확보, 그리고 국내·외 대테러 군사작전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 (5) 관세청

대테러위해작품장비저지 대책수립시행, 총기·폭발물 등의 탐지를 위한 검문검색기술 개발, 그리고 요원양성을 하고 있다.

#### (6) 국가정보원

국제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대테러시행·감독·조정기능, 대테러 위기관리방법 연구 개발, 그리고 대테러정보·기술·장비·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7) 대테러전담진압조직

대테러전담진압조직으로는 1982년 창설된 공수특전단 707부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경찰특공대, 그리고 1993년 해상테러 방지를 위하여 해군 UDT내에 해상특공대를 창설하였다. 위의 부처별 테러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sup>28)</sup>

가. 테러방지를 위한 상호기관의 업무협력공조체제가 미비하다.

나. 테러발생시에 진압 및 구출을 위한 책임부서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대책본부를 신설하여 정보수집, 테러발

---

28) 구상희, 『테러학개론』 (서울: 동문, 1999), pp. 183-185.

생시 진압·구조체제 확립, 그리고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sup>29)</sup>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대테러전담기구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테러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 1) 테러예방을 위한 위기관리체제 확립

대테러활동의 효과성은 대테러활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훈련·계획수립의 정도에 성패가 좌우되는 테러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단계이다. 이러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의 테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1) 예방(Prevention)

테러의 목적과 정당성에 관계없이 국제법 질서 아래에서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의 일치와 함께 테러를 조직하고 훈련시켜 수출하거나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활동을 개발한다.<sup>30)</sup>

#### (2) 저지(Deterrence)

상황적으로 테러범들이 테러를 일으킬 상황과 여건을 용인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주요시설물 및 요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기하는데 가급적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9) 윤우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2), p. 28.

30) Heymann, P.B., *Terrism and America: A Commonsense Strategy for a Democratic Society* (MIT press, 1998), pp. 11-12.

### (3) 대응(Reaction)

구체적인 테러에 대항하는 공격활동이다. 테러가 또 다른 테러를 낳는다는 말은 국가가 테러를 정치적인 이유로 용납하거나 관용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하는 공격으로 좌절시켜야 된다.<sup>31)</sup>

### (4) 예측(Prediction)

예측은 위의 다른 3가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정보와 첩보들로서 가능해진다. 북한에 관한 전술, 훈련, 그리고 구체적인 테러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테러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2) 테러예방을 위한 사전단계

예방테러는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진압작전계획, 훈련, 대테러부대의 관리유지 등이 포함된다. 예방테러는 테러위험 사건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방테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의 원천인 테러행위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 테러단체나 각종 테러위험 정보 분석, 대응방안 수립, 그리고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1) 테러정보수집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31) Cooper, J., Nelson, And Ronczkowski, M., "Tactical/investigative analysis of targeted crimes, in *Advanced Crime Mapping Topics*," *Nation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 Denver, CO* (April 2002), p. 28.

## (2) 테러위협분석

테러위협에 관련된 시설물 및 조직에 대한 취약성에 관한 정보 및 첩보를 충분히 활용한다.

## (3) 테러예방을 위한 보안

예방을 위한 보안은 크게 작전보안, 대인보안, 대물보안으로 구분된다. 첫째, 작전보안은 통신체계를 통한 정보수집 및 배포활동과 대인간의 접촉에 관한 보안이므로 각별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대인보안은 대인적 보안조치이다. 테러범의 공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협의 인식도를 높이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경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대물보안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보안이다. 특히 공항만의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기회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4) 위기처리계획 수립

테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기에 테러사건의 위기를 처리·통제할 수 있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훈련시켜야 한다.<sup>32)</sup>

## 3) 테러발생시 대응단계

### (1) 정책모형의 결정

32) 이상팔,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의 보완점 모색,” 『입법정보』, 제73호 (2002), pp. 4-5.

북한에 의해 자행된 테러 유형으로는 항공기테러, 폭탄테러, 요인암살·납치 및 무장간첩침투 등이다. 그리고 예견되는 유형으로는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그리고 해외주재공관·상사원·해외여행객·해외동포를 향한 테러이다. 만약 이러한 테러사건이 발생한다면 대테러전담기구는 테러상황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신속히 결정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 (2) 위기관리기능의 가동

위기관리기능을 3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모형은 테러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완화(Mitigation)는 테러로 인하여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위험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대비(Preparedness)는 테러사건 지역내·외에서 중요한 자원들의 확인과 대응기관들 사이에 필요한 협력을 포함하는 대응계획의 실행과 인명구조와 재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임무이다.

셋째, 대응(Response)은 비상장비의 지원과 2차적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능이다.<sup>33)</sup>

## (3) 진압 및 구조 활동

테러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대테러조직은 인질범과 협상, 전략적 대응, 테러범 신원 확인과 특성파악, 테러범의 제압, 폭발물 제거, 현장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선진국에서는 경찰특공대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경찰특공대의 경우 특별대응팀, 신속대응팀, 비상대응팀, 특별작전팀, 그리고 특별출동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찰특공대는 인질구조작전이 1차적 임무이며 현장

33) 이황우·한상암 共譯, 『대테러정책론』 (서울: 명진출판사, 1996), pp. 33-36.

보존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sup>34)</sup> 둘째, 특수기동타격대인 제707부대는 실질적으로 테러를 진압·구조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해군 UDT내에 해상특공대는 해상테러 진압·구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압 및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테러업무를 연속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 상호간 장비·자원의 상호운영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위 기관들의 보고·지시체계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대테러전담기구 신설이 필수적이다.

### 3. 테러예방을 위한 외교적 대응

####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북한과 같이 국가가 직접 테러를 지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제적인 협약, 외교관계 단절, 국가승인 철회, 그리고 경제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비군사적 제재가 있다.<sup>35)</sup>

(1) 북한은 1987년 이후 테러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9·11 테러사태 이후 대테러 정책 천명 및 국제협약가입 등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테러관련 12개의 국제협정·의정서 등에 6개만 가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테러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안보리 결의안 1373호 이행 및 테러분자들에 대한 금융동결 조치가 미흡했고, 미국의 대테러회의 개최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sup>36)</sup> 이에 우리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국제협정 및 의정서 가입을 중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의 강력한 조치는 주로 외교관계의 단절로 테러국가의

34) 김상훈, 『SWAT 테러전 대응장비』 (서울: 평화출판사, 1993), pp. 64-75.

35) 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p. 323.

36) 김태진, 위의 글, p. 56.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재외교관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행한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강제로 추방당하고 양국간의 외교단절을 가져온 사건은 많이 있다. 그중에서 북한이 외국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당해국가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 혐의로 북한외교관들이 강제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1983년 버어마랑군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으로 버어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하였고, 폭파사건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북한대사관을 폐쇄하고 공관원을 추방하였다.<sup>37)</sup>

- (3) 미국 국무부는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2003년”이란 보고서에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UN은 테러지원 7개국에 대하여 무기·경제원조·국제금융기관의 차관제공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sup>38)</sup>

## 2) UN기구를 통한 대응

한국과 북한이 비회원국가로 활동할 때는 UN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지금은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UN회원국들의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효과적이다. 국제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은 UN에서 여러 차례 시도해왔다. UN총회는 국제테러에 관한 임시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과 그 결과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1) 인류의 근본적인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국제테러를 만장일치로 비난한다.
- (2) 국제테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3) 모든 회원국들에게 UN 산하기관과 협조 하에 국제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

37) 최윤수,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에 안저한가?,” p. 44.

38) U. 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Washington, D. C.: April 2003), pp. 76-82.

39) 제성호, 『항공기테러와 국제법』 (서울: 지평서원, 1989), pp. 430-447.

는데 기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4) 국제법 하에서 다른 회원국이 테러에 가담하거나 또는 테러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되며, 테러집단을 조직·충동하고 협조하지 않도록 UN헌장을 준수하는 회원국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 (5) 1963년 서명된 비행 중 공격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 동경협약과 1970년 체결된 비행기 불법납치 등에 관한 국제테러를 규탄하고 공동대처한다는 헤이그 협약 등 기존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서명국가들에게 가입하도록 종용한다.
- (6) 회원국들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테러활동을 대비하고 국제협약에 준한 국제법을 제정하여, 국제테러리즘의 문제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한다.
- (7) 각 국가의 책임관할 영토 내에서 국제테러리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대책을 관련된 UN특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한다.
- (8) 국제테러를 다루는 각국의 정책자료를 집계하여 책자를 발간·배포한다.
- (9) 지금까지 여러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지원테러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인인도와 기소의 원칙에 관한 보완적인 지원협정이 요망된다.
- (10) 국제테러의 원인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보이사회는 UN헌장의 규정을 필요시에 적용하며, 국제테러를 야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인의 영토점유, 식민지, 인종차별 등의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UN이 모든 국제테러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UN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UN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각종 테러방지대책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테러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쟁점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점이 있다.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지원테러에 대처하는 우리에게는 UN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방안을 특별임시회의에 건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테러에 대한 양국가의 동일한 이해관계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양국가간의 대테러 협력체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다.<sup>40)</sup>

테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은 국제테러를 어떠한 유형, 목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든지 간에 국제법 하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명백한 태도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테러에 관한 명백한 태도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1) 국제테러의 동향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발신과 수신을 원활하게 운용하는데 근본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여야 한다.
- (2)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3) 국제테러리스트의 분류를 전산처리하고 신속하게 이들의 동향을 알리고, 테러를 방지하는데 대한 정책결정수준에서의 노력을 유도한다.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와 북한은 테러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방법과 전술을 포함한 각종의 정보를 교환하고, 일반적인 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에 관련된 수사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 및 활용방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것은 테러범이나 사건의 수사에 관한 협조의 형태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테러범의 인도조약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다.

40) Paul Wilkinson, "International Dimensions," in William Gutteridge(ed.), *The New Terrorism*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6), p. 49.

## V. 결 론

1945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테러사건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테러이다. 또한 외국에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대테러대상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

6·15 선언 이후 김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에 의한 테러가 없을 것이라는 확증도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행위도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환경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잠재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중국연변조선족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면서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끊임없는 테러 전술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현재 북한에 의한 테러발생가능성은 친북인사나 간첩에 의한 테러, 국내·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이용한 간접지원테러, 그리고 해외테러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한 테러 유형으로는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그리고 해외주재공관·상사원·해외여행객·해외동포를 향한 대인테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입법적인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①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법령, 테러정책의 기획에 관한 사항,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관련부처의 협력, 예방을 위한 보안 및 정보수집범위, 그리고 테러 진압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②부처별로 세분화된 대테러전담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신설이 절실하다.

둘째, 테러예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① 위기관리체제를 예방, 저지, 대응, 예측의 체제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②이를 근거로 사전 예방인 테러정보의 수집, 테러위협 분석, 테러예방을 위한 보안, 위기처리계획 수립 등을 하여야 한다. ③테러 발생시에 정책모형을 결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위기관리기능을

가동하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예방을 위하여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①국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협정 및 의정서 가입을 종용하고 ②테러자행시에 외교를 단절하거나 외교관을 추방하는 강경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③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④또한 UN을 통하여 북한의 테러행위의 조짐이나 우려를 간접적인 조치로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행위 공론화는 상당히 기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⑤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테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방법과 전술을 논의·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진정한 평화적 욕구에 의한 화합의 단계에 진입했는지를 입증할 때까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테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